

별도첨부

혁신지향 공공조달 방안

2019. 7. 2.

관계부처 합동

순 서

I. 추진 배경	1
II. 공공조달정책 현황 및 문제점	2
1. 공공조달정책 현황	
2. 혁신 유인으로서 공공조달의 문제점	
III. 혁신지향 공공조달 추진방안	5
1. 혁신지향 구매제도 활성화	
2. 국가 혁신조달 플랫폼 구축	
3. 도전적 수요기반 혁신교제 발굴 및 속도감 있는 자원	
4. 적극 조달행정 면책·인센티브 활성화	
IV. 향후 계획	13
V. 참고 자료	14

I. 추진배경

□ 공공조달정책의 중요성 부각

- 재정 확대에 따라 정부 효율성에 대한 관심과 정부혁신 요구 증대
 - 특히 일상생활과 밀접한 복지·환경·안전·치안·행정서비스 등 국민 체감 분야 공공서비스의 효율과 질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요구가 지대
- 공공서비스 수준 혁신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포용적 사회의 기반 구축을 위한 핵심과제이며, 이를 위해 공공조달 정책의 획기적 개선이 필요
 - 정부는 2019년 정부혁신 종합추진계획에 ‘새로운 가치를 창출·실현하는 공공구매조달 혁신’을 신규 과제로 기포함(19.2)

□ 공공조달의 혁신성장 지원 역할에 대한 중요성 부각

- 공공서비스 수준의 제고를 위해 신기술·신제품을 공공구매 형식으로 기획·도입·활용하는 과정에서 민간부문의 기술혁신 촉발 가능
 - 공공조달 구매력(18년 123조 원, GDP의 7%)을 활용하여 혁신기술, 혁신제품의 초기시장 창출 지원 가능
- 기술선진국*은 공공조달을 적극 활용하여 미래기술개발 및 차세대 산업육성, 기술기반 중소벤처육성, 공정경쟁 질서 확립 등 사실상의 묵시적 산업정책 수행

* (EU) 혁신조달 플랫폼, (영국) 혁신성장형 공공조달, (캐나다) 혁신 시제품 구매프로그램 등

□ 공공서비스 질 향상과 혁신성장 지원을 동시에 달성하는 ‘혁신지향 공공조달’ 필요

- 검증된 기성제품과 경쟁입찰 위주의 기존 조달관행 극복
 - 공공부문이 한 단계 높은 목표 수준을 적극 제시하고, 이에 부응하는 혁신기술, 혁신제품을 선도적으로 구매하여 공공서비스 수준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켜 나가는 혁신지향 조달생태계 활성화 필요
- 이를 위해 도전적 공공수요 발굴 → 혁신조달기반(제도·사업) 강화 → 혁신조달 플랫폼 구축 → 면책·인센티브 강화 등 쉼주기에 걸친 개선 필요

Ⅱ. 공공조달정책 현황 및 문제점

1. 공공조달정책 현황

□ 공공조달정책의 변화 참고 1

- 공공조달은 해방 후 60년대 초반까지는 원조물자의 배분·관리, 산업화시대에는 국토개발 등 산업기반 구축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수행하면서 예산 절감과 효율성 제고에 중점
- 김영삼정부 시절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를 도입한 후, 노무현정부에서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공공구매확대 방안**을 실시하는 등 중소기업 지원의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기능

* 법규상 규정된 공공기관 의무 우선구매 기술인증제품  참고 2

**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인증범위 구조조정 및 구매목표비율제 도입(당시 5%, 현재 10%)

<공공조달 규모 및 중소기업제품 구매 현황('18년)>

· 공공조달은 123조 원으로 GDP의 약 7%, 정부 총지출의 약 29% 수준



· 중소기업 제품(물품, 용역, 공사) 구매: 공공조달 총액(123조 원)의 76%(94조 원)

· 중소기업 물품 구매: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총액(94조 원)의 35%(33조 원)

·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구매: 중소기업 물품 구매 총액(33조 원)의 14%(4.5조 원) 수준 (← '11년 1.7조 원)

□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실태

- 공공기관은 구매목표비율 달성이 쉬운 제품의 구매를 선호하고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도 특정 제품군에 편중*

*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공공조달 상위 품목은 데스크톱 컴퓨터, 금속제 창이고, '18년 기준 상위 10개 품목이 전체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의 약 30% 차지

-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의 인증은 부분적 성능 개량이나 특정 품질을 증명해주는 수준*

* 데스크톱 컴퓨터의 경우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인증 대상이 대부분 녹색인증이며 인증에 요구되는 기술 수준은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에 불과

- 중소기업은 도전적 기술혁신 보다 인증취득을 위한 부분 개량에 집중

2. 혁신 유인으로서 공공조달의 문제점(☞ 참고 4 이해당사자 의견)

□ 기술혁신 유인력 부족

- 혁신제품은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과 실적 부재로 구매를 기피
 - 입찰비리 중심의 감사 관행으로 검증된 기존제품을 경쟁입찰로 구매하는 것을 선호, 혁신제품이 필요해도 수의계약 구매가 곤란
- 기존 공공조달정책은 중소기업 육성이라는 성과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기성 제품에 대한 판로보장 중심으로 기술혁신 촉진에 미흡
 - ※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구매실적이 기관평가에 반영되나, 실적달성을 위한 관성적 구매에 치중

□ R&D와 공공조달의 연계 미흡

- 공공수요에 기반한 R&D 정책의 미흡으로 창의적 해결방식의 혁신적 공공서비스 제공에 한계
- R&D 결과물의 실증 및 시범구매 경로도 부족
 - ※ 벤처기업(454개) 설문조사('19년 4월, 전자신문&벤처기업협회 공동) 결과 개선이 시급한 혁신성장정책 1순위(25.5%)는 공공조달시장 혁신으로, 벤처·스타트업의 공공조달 문턱을 낮추는 시범구매 활성화를 요구

□ 수요정보와 공급정보의 비대칭

- 기업은 공공기관의 수요와 요구사항 정보가 부족하고, 공공기관은 기업의 혁신제품 정보가 부족
 - ※ 공공수요는 나라장터의 입찰공고를 통해서만 확인 가능하고, 나라장터에는 창업·벤처기업 전용의 쇼핑몰인 ‘벤처나라’가 있으나 혁신제품에 대한 수요자와 공급자간의 정보 교류의 틀은 부재
- R&D가 필요한 공공수요는 부처별로 산발적으로 조사되고, R&D 기획 단계에서 일시적·단편적으로 활용될 뿐 기업과 공유 부재

□ 통합적 정책체계 미비

- 부처간 협업체계 부재로 국가적 조달정책 마련 및 효율적 운영에 한계
 - 관련 제도·부처가 다양*하여 국가적 정책 마련이 어렵고, 국가 차원에서 조달정책·제도에 대한 상시 구조조정 및 선제적 대응 체계 부재
 - * 국가계약법·조달사업법(기재부), 지방계약법(행안부), 판로지원법(중기부)
 - 혁신제품 평가 기준의 통합적 관리도 미흡하고, 공공기관 평가를 여러 부처가 수행하면서 통합적 면책 및 인센티브 방안 마련 곤란

Ⅲ. 혁신지향 공공조달 추진방안

비 전

국민이 만든 혁신에 투자합니다!

4대 추진전략

10개 과제

혁신지향 구매제도 활성화

- ①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혁신성 강화
(기재부·중기부, 조달청)
- ② 혁신성 평가를 통한 구매 활성화
(기재부·산업부·인사처·조달청)
- ③ 혁신제품 구매 촉진을 위한 수의계약 대상 확대
(기재부·조달청, 산업부)

국가 혁신조달 플랫폼 구축

- ① 정보 비대칭 해소를 위한 혁신제품 통합몰 구축
(조달청, 중기부·과기부·특허청)
- ② 범부처 및 민관 합동 혁신조달 협업체계 마련
(기재부·조달청, 관계부처)

도전적 수요기반 혁신과제 발굴 및 속도감 있는 지원

- ① 도전적 수요 기반의 혁신과제 발굴 및 지원
(기재부·산업부·과기부, 조달청 등)
- ② 단계적 협의에 의한 과업확정 활성화
(기재부·조달청·행안부)
- ③ 맞춤형 R&D 지원 강화
(산업부·과기부·행안부·중기부)

적극 조달행정 면책·인센티브 강화

- ① 혁신지향 조달행정 징계면책 및 인센티브 강화
(기재부·인사처·행안부·조달청, 감사원)
- ② 적극 조달행정 가이드라인 마련 및 교육
(기재부·행안부·조달청·특허청, 인사처)

전략 1. 혁신지향 구매제도 활성화

①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혁신성 강화(기재부·중기부, 조달청)

- 기술혁신 촉진 관점에서 현행 ‘우선구매대상 중소기업 기술개발 제품 16종(☞ 참고 2)’의 실효성을 재검토하여 범위를 조정
 - 기술개발제품 연구용역*을 통해 품질인증(성능인증, 우수조달물품, 녹색인증) 등 중소기업의 수요 창출(판로지원법 제13조) 취지에 맞춰 기술의 혁신성, 기술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 * 우선구매 대상별로 활용 현황 및 성과 분석 등을 통해 기술개발제품 제외 검토
-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대상인 공공기관 개발 선정품(기재부), 성능 인증제품(중기부), 우수조달물품(조달청) 등의 선정 기준·절차를 중소기업 기술개발 촉진 관점에서 개선

② 혁신성 평가를 통한 구매 활성화(기재부·산업부·인사처·조달청)

- 혁신 기술·제품 개발 촉진과 공공조달 연계를 통한 공공서비스 수준 제고 관점에서 “혁신성 평가지표”의 혁신성 강화
 - 지표의 기술혁신 촉진 기능 강화를 위해 평가 기준·항목 등 지속 개선(산업부)
 - 혁신지향 범부처 TF에서 혁신성 평가 지표의 법적근거 상향 등 평가 객관성 강화 방안 검토
- “혁신성 평가” 통과 기술·제품은 적극적 공공구매로 연계
 - 국가 R&D 혁신제품 수의계약 허용(패스트트랙 I) 및 상용화 前 시제품 수의계약 허용(패스트트랙 II) 평가 기초 요소로 활용
 - * 해당 수의계약 허용 대상 선정시 혁신성 평가지표를 활용토록 계약 예규 반영 추진
 - 혁신성 평가 기준을 통과한 혁신제품 구매 후 예기치 못한 문제 등이 발생하더라도 조달시점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징계 면책
 - * 적극행정 고의·중과실 배제 추정요건 : ① 시적 이해관계 無 ② 중대한 절차상 하자 無

③ 혁신제품 구매 촉진을 위한 수의계약 대상 확대* (기재부 · 조달청, 산업부)

* 현재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참고2), 중증장애인생산물 등에 대해서도 정책적 지원을 위한 수의계약 제도 운영 중

- 국가 R&D 결과물 및 상용화前 시제품도 혁신성을 평가(☞ 참고 5) 하여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그 구매실적을 기관평가에 반영함으로써 공공시장에 신속히 진입할 수 있는 패스트 트랙 마련

① (패스트트랙 I) 국가 R&D 혁신제품 수의계약 허용

각 부처가 소관 국가 R&D 제품의 혁신성을 평가하여 통과시 수의계약 가능 대상으로 지정
※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19.3월 시행)에 의해 국가R&D 결과물 중 각 부처에서 혁신성을 인정받으면 다른 부처·공공기관의 수의계약도 허용

② (패스트트랙 II) 상용화前 시제품 수의계약 허용

조달청이 상용화 前 시제품의 혁신성을 평가하여 통과시 수의계약 가능 대상으로 지정
※ 국가계약법 시행령(수의계약 근거) 및 조달사업법 시행령(사업 근거) 개정('19.3분기 시행)

※ 혁신성 평가 : 공공기관의 혁신제품 구매 촉진을 위해 i)공공성 및 사회적 가치, ii)시장성, iii)혁신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혁신 시제품 시범구매사업 신설 및 강화

- 혁신성 평가를 통과한 시제품으로 시범구매 후보제품 풀(POOL)을 구성, 조달청 예산으로 구매하여 테스트 희망한 수요기관에 시제품을 제공

<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 절차 >

혁신제품 제안 및 평가				테스트 희망기관 매칭 및 계약				테스트·상용화	
조달청	기업	조달청	조달청·수요기관	조달청	조달청·수요기관	기업·테스트기관	조달청·기업	테스트기관	기업
모집 공고	제안서 제출	혁신성 평가 → 시범구매 후보제품 풀 구성	제품 풀 공개 → 테스트 희망 수요기관 신청	기업과 테스트 희망 기관 매칭	사전업무 협약체결	테스트 계획서 작성	구매 계약 체결	테스트 및 결과 피드백	상용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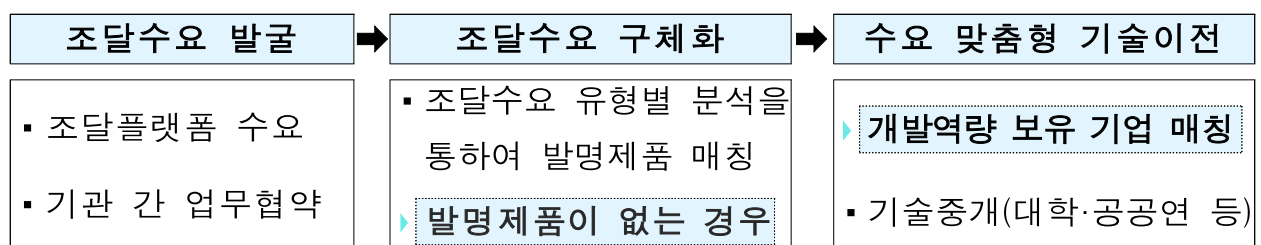
※ (해 외 사례) 캐나다 연방조달청 혁신 시제품 구매프로그램('10년 시작, 혁신과학경제 개발부로 이관, 확대 개편 중), 미국 연방조달청 혁신제품 시범구매('18년 시작) 등

- 수요기관의 테스트 결과, 우수제품은 혁신제품 통합풀(과제 2-①)에서 중점 홍보
- 수요기관이 시범구매 후보제품을 자체예산으로 구매하는 경우 구매실적을 기관평가의 인센티브에 반영

전략 2. 국가 혁신조달 플랫폼 구축

① 정보 비대칭 해소를 위한 혁신제품 통합몰 구축(조달청, 중기부·과기부·특허청)

- 쌍방향 정보교환이 가능한 열린장터(오픈마켓) 방식의 통합몰 구축(20.1 운영)
 - R&D 혁신제품, 우선구매대상 인증제품 등 수의계약이 가능한 제품을 기업이 등록
 - AI·빅데이터 등 첨단기술 활용, 통합검색 및 수요·공급 자동매칭 지원
- 부처별로 분산된 공공수요조사 창구를 통합, 조사양식 등을 표준화
 - ※ 혁신 기술·제품을 활용한 공공수요를 기업이 통합몰을 통해 공공기관에 제안 가능
 - 혁신조달 수요조사와 관련하여 특허 빅데이터 관점의 검색 및 분석이 용이하도록 특허데이터 제공
 - * 특허청이 보유 중인 국내외(미국, 일본 등 12개국) 특허 정보를 조달청 혁신조달플랫폼에서 제공하여 혁신제품 개발 필요시 활용
- 혁신제품 시범구매, 단계적 협의에 의한 과업확정 방식 등 신설된 계약절차를 소주기적 지원
- 전문가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혁신제품 개발역량 보유 기업과 제품 수요처인 공공기관을 매칭*하고 컨설팅 지원
 - * 수요 공공기관에 기업 소개, 기업에 조달플랫폼의 입찰 정보·사업 제공
 - 특허청 특허거래 전문관* 등을 활용, 수요기관과 혁신제품 개발역량 보유기업간 매칭을 컨설팅
 - * 최근 5년간 지식재산권 1,346건, 기술료 1,007억원 거래 등





② 범부처 및 민관 합동 혁신조달 협업체계 마련(기재부·조달청, 관계부처)

- 공공조달 관련 국가적 중장기 정책·제도* 마련 및 성과관리를 위한 범부처 협업·조정 체계인 (가칭)조달정책심의위원회 신설 추진(조달사업법 개정)

* 중소기업 판로지원, 사회적 책임조달, 기술혁신 촉진, 기본계획 수립 등 조달 정책·제도

- 위원회 산하에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분야의 도전적 조달수요를 발굴·확정하는 민관 합동 (가칭)공공수요발굴위원회 설치·운영* 추진

*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19 하반기부터 우선 설치·가동하고, 향후 조달사업법 개정 시 반영

전략 3. 도전적 수요기반 혁신과제 발굴 및 속도감 있는 지원

① 도전적 수요 기반의 혁신과제 발굴·지원(기재부·산업부·과기부, 조달청 등)

- 복지·환경·안전·치안·행정서비스 등 국민생활 밀접 5대 분야의 공공서비스 수준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도전적 공공수요 대표 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속도감 있게 실행
 - 정부혁신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5대 분야 대표과제를 발굴
 - 차세대 전자정부시스템, 공공빅데이터 등 시급한 과제 우선 검토
- 혁신지향 공공조달 범정부 추진단을 통해 5대 분야의 혁신과제를 조속히 선정하고 이를 '20년 본격시행
 - 정부혁신과제로서의 시급성, 기술적 도전성, 산업 파급성을 고려하여 선정하고 '20년 예산에 반영 추진
 - 향후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공수요 발굴위원회를 '19년 내에 구성하여 '20년 이후 속도감 있게 추진
 - ※ 대표과제별 정부혁신목표 설정, 과제발굴, R&D와 구매의 조합전략 구성, 실행방안을 제시('19. 하반기)
 - 정부 R&D 예산기획과 공공구매 관련 예산편성시 반영 추진
- 공공수요에 부응하는 i)혁신적 기술·솔루션이 경쟁적으로 제안되어 협의를 통한 구체화가 가능한 경우 바로 혁신조달 절차로 연계하고, ii)선행 연구개발이 필요한 경우 과제 성격에 적합한 R&D 지원
 - ※ 도전적 수요 기반 혁신과제 발굴 및 지원 사례: 국립공원 관리용 맞춤형 드론(☞ 참고 6-1), 미국 국방성의 시장에 없는 트랜지스터 구매(☞ 참고 6-2)

② 단계적 협의에 의한 과업확정 활성화(기재부·조달청·행안부)

- 사전에 규격을 확정함으로써 첨단기술 수용을 어렵게 하는 기존 조달관행에서 탈피하여 아이디어 협의와 경쟁을 통해 구체적 스펙을 결정한 후 최적의 공급기업을 선정하는 문제해결형 계약방식* 활성화

* 국가계약법 시행령(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에 반영하여 '19.3월부터 시행
※ 사례) 프랑스(해상 풍력에너지 사업), 영국(디지털 방송 전환 관련 취약계층 지원사업) 등

- 단계적 협의에 의한 과업 확정방식 활성화를 위해 표준세부 운영 기준·공고문을 마련하여 전파, 발주기관 업무 지원·교육
- 단계적 협의에 의한 과업확정 방식의 입찰 실적을 기관평가에 반영

<단계적 협의에 의한 과업확정 방식 절차>

입찰공고 ⇨ 단계적 협의* ⇨ 과업 규격 확정 ⇨ 최종제안서 평가 ⇨ 낙찰자 선정

* 다수 업체들과 각각 2회 이상의 협의를 통해 계약목적물의 세부내용 등 과업의 규격을 확정

③ 맞춤형 R&D 지원 강화(산업부·과기부·행안부·중기부)

- 혁신과제를 뒷받침할 기술이 시장에 없어 R&D 지원이 필요할 경우, 기존 관 주도의 기술개발에서 벗어나 민간주도의 챌린지 방식 기술 개발* 또는 수요기반 조달연계 R&D 사업 등을 적극 활용

* 예) 美 국방성 고등연구계획국(DARPA)의 자율주행차, 재난구조 로봇 챌린지('06년~)

- 제기된 공공수요에 대한 최적 R&D를 기획·지원하고 수요 기관에서 R&D 결과에 대해 실증 서비스 제공*
- * '19년 공공수요 기반의 조달연계 R&D 시범사업을 통해 산업부는 LH공사의 장기 임대아파트용 다기능 복합 환기 시스템 개발 등 7개 과제 추진 중, 과기부는 야간작업자 발광 안전의복(환경미화원, 야간순찰단 및 환경순찰단 등 활용) 등 8개 과제 추진 중, 중기부는 지역난방공사의 지구단위에너지 스마트시티 시스템개발 등 15개 과제 추진 중
- 혁신과제에 대한 신속한 R&D 지원이 필요한 경우, 긴급 대응 R&D 지원 적극 확대
- * '19년 국민생활안전긴급대응연구 시범사업을 통해 약물 성범죄 사전예방 휴대용 탐지 키트(경찰청), 산불확산 대응 시스템(산림청) 등 4개 과제 추진 중(과기부, 행안부)

전략 4 적극 조달행정 면책·인센티브 활성화

① 적극 조달행정 징계면책·인센티브 강화(기재부·인사처·행안부·조달청, 감사원)

- 신산업 분야 등 제도·규정이 불명확하거나 선례가 없는 조달행정에서 사전컨설팅 제도*를 적극 활용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면책
- * 규정이나 지침 해석상 어려움으로 의사결정에 애로가 있는 사안에 대해 사전에 의견을 구하는 경우 감사원이나 자체감사기구가 의견을 제시하는 제도
- 일정요건*을 갖춘 혁신 조달행정에 대한 면책 법제화 추진
- * 예) 공공수요발굴위원회 선정 수요 또는 혁신성 평가 통과 제품 구매(조달사업법 개정)
- 패스트 트랙 I·II 방식 또는 단계적 협의에 의한 과업확정 방식의 구매실적 등 혁신지향 공공조달 사례에 대한 기관 평가 인센티브 부여
- 혁신조달 우수사례 경진대회(☞ 참고 8)를 개최하여 혁신적 공공조달 우수 사례에 대해 기관·개인 포상

② 적극 조달행정 가이드라인 마련·교육(기재부·행안부·조달청·특허청, 인사처)

- 혁신조달 가이드라인 마련·배포(기재부·조달청·특허청)
 - 혁신지향 구매제도, 국가혁신조달 플랫폼 이용방법 및 인센티브 등에 관한 발주기관 및 기업용 종합 안내서를 마련·배포하고 설명회 개최
 - 발명특허제품의 공공구매 활성화를 위해 수의계약 대상이 되는 대체품 없는 발명특허제품 여부 판단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 * 대체불가성은 시장 내 특허 비침해 대체품이 존재하지 않음을 의미하며 특허, 기술 및 경제적 측면 등에서 판단 가능
- 적극 조달행정 교육 강화(행안부·조달청, 기재부·인사처)
 - 공공기관 구매담당자 대상 인센티브 방안, 신설된 각종 제도·사업, 적극행정 징계면책 등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설명회 개최('19 하반기)

IV. 향후계획

- 범정부 추진단*을 구성하여 세부과제별 추진 및 이행상황에 대한 주기적 점검·관리

* 기재부 2차관을 단장으로 관계부처 고위공무원 및 민간전문가 참여

< 과제별 추진일정(안) >

과제	주관	협조	일정	비고
전략 1. 혁신지향 구매제도 활성화				
①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혁신성 강화	기재부, 중기부	조달청	'20.2/4	'19년 연구용역
② 혁신성 평가를 통한 구매 활성화	기재부, 산업부 인사처, 조달청		'19.3/4 ~	
③ 혁신제품 구매 촉진을 위한 수의 계약 대상 확대	기재부, 조달청	산업부	'19.~	
전략 2. 국가 혁신조달 플랫폼 구축				
① 정보 비대칭 해소를 위한 혁신제품 통합물 구축	조달청	중기부 과기부 특허청	'19.4/4	'20년 플랫폼 본격 가동
② 범부처 및 민관 합동 혁신조달 협업체계 마련	기재부, 조달청	관계부처	'20.~	
전략 3. 도전적 수요기반 혁신과제 발굴 및 속도감 있는 지원				
① 도전적 수요 기반의 혁신과제 발굴 및 지원	기재부, 산업부 과기부	조달청	'19.3/4 ~	
② 단계적 협의에 의한 과업확정 활성화	기재부, 조달청 행안부	관계부처	'19.3/4 ~	
③ 맞춤형 R&D 지원 강화	산업부, 과기부, 행안부, 중기부		'19.~	
전략 4. 적극 조달행정 면책·인센티브 강화				
① 혁신지향 조달행정 징계면책 및 인센티브 강화	기재부, 인사처, 행안부, 조달청	감사원	'19.2/4 ~	
② 적극 조달행정 가이드라인 마련 및 교육	기재부, 행안부, 조달청, 특허청		'19.3/4	

참고 1

공공조달의 시대별 역할과 주요정책

기간	시대적 과제	공공조달 주요 정책
해방 이후 ~ 제2공화국 (1945~1961)	전후복구 국가재건	○ 원조물자의 배분·관리 ▶ 임시외자충국 설치('49) - 외국원조물자 관리 ▶ 외자청 개청('55.2) - 임시외자충국 및 외자구매처 통합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정부 (1961~1993)	산업화	○ 산업기반 구축 - 사회간접자본 확충 및 국토개발 ▶ 조달청 개청('61.10) - 외자청 폐지, 내·외자구매 및 시설공사 포괄의 중앙조달체제 시작 ▶ 중소기업제품판로지원 시행('66.12) ▶ 조달기금법 제정- 물가조절을 위한 주요물자 비축제도 도입('67.2) ▶ 원조자금 외자구매 종료('76) ▶ 88 올림픽 지원의 정부집중 조달 - 올림픽선수촌, 경기장 등 건설공사계약, X-ray 투시기등 내·외자 구매
김영삼 정부 (1993~1998)	세계화	○ 품질 확보(표준화) 및 해외 진출 지원 ▶ 단체표준인증제품 우선구매 시행('93.3) ▶ WTO 정부조달협정 가입('95.12) ▶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및 우수조달제품 우선구매제도 도입('96)
김대중 정부 (1998~2003)	정보화	○ 전자조달행정: 조달행정의 효율화·투명성 획기적 개선 ▶ 전자입찰 시행('01.1) ▶ 나라장터 개통('02.9) - 전자정부 11대 사업의 하나로 국가종합 전자조달 체제 구축 ▶ 여성기업 우선구매 제도 시행('99.6) ▶ 구매조건부기술개발사업 시범도입('02)
노무현 정부 (2003~2008)	동반성장	○ 중소기업 혁신과 사회적기업 지원 ▶ 성능인증·성능보험제도 도입('05.7) ▶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공공구매 확대 방안('06.3) * 기술개발제품 인증범위 구조조정 및 기술개발제품 구매목표비율제(5%) 도입 ▶ 중기청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구축('07.1) ▶ 사회적기업 우선구매 제도 시행('07.7)
이명박, 박근혜 정부 (2008~2016)	녹색성장 창조경제	○ 기존 정책의 양적 확장 ▶ 여성기업제품 우선구매목표 비율(5%) 도입('09) ▶ 장애인기업제품 의무구매목표 비율(1%) 도입('16)

참고 2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 중소기업 기술개발 장려를 위해 공공기관이 우선 구매해야 하는 ‘기술개발제품’의 종류를 지정하고 일정비율* 이상 구매하도록 규정

* 구매목표비율제: 중소기업 물품 구매액 중 10% 이상을 우선 구매하도록 규정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12조③)

○ 노무현정부('06년)는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의 범위를 신기술이 적용된 제품 위주로 정비하여 21개에서 5개 종류*로 구조조정

* 아래 표의 성능인증, 우수조달물품, GS시험인증, 신제품(NEP) 및 신기술(NET)

- 이후 신기술이 적용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종류의 인증들(상표·디자인, 녹색인증 등)이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의 범위에 지정·추가

<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종류 >

	인증명칭	인증설명	분류	근거 법규(시행연도)	부처
1	성능인증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우선구매제품의 성능을 확보했음을 증명하는 제도로써 공공기관이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	품질인증	판로지원법 제15조 (2005)	중기부
2	우수조달물품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위해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 중 기술·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대상으로 엄선하여 지정	품질인증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18조(1996)	조달청
3	GS시험인증	정부가 SW의 품질을 보장하여 SW업체의 판로지원	품질인증	소프트웨어산업법 제13조(2000)	과기부
4	신제품(NEP)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이 적용된 제품으로 판매 시작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제품	기술개발	산업기술혁신법 제16조 (2006)	산업부
5	신기술(NET)	신기술을 조기에 발굴하여 그 우수성을 인증부여하고 개발된 신기술의 상용화와 기술거래를 촉진을 통해 초기시장 진출기반을 조성	기술개발	산업기술혁신법 제15조의 2 등(1993)	산업부· 환경부·국토부
6	우수조달 공동상표	5인 이상의 중소기업자가 개발·보유한 공동상표물품으로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지정	상표· 디자인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13조 5호에서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한 제품”으로 행정규칙(시행세칙 제3조)으로 지정	조달청
7	구매조건부신제품 성공제품	수요처(대기업, 중견기업, 공공기관, 해외기업 등)에서 구매를 조건으로 기술개발을 요청받은 중소기업의 R&D자금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	기술개발		중기부
8	민관공동투자 성공제품	정부와 투자기업이 공동으로 기술개발자금(협력펀드)을 조성하여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R&D지원사업	기술개발		중기부
9	공공기관 개발선택품	국산화를 위해 공공기관과 제조업체가 공동 협력하여 개발한 제품으로서 공공기관이 우선구매하기 위해 지정한 제품	기술개발		기재부
10	성과공유과제 성공제품	기업 간의 공동의 노력을 투입하여 거둔 성과를 사전에 정해진 방법으로 공정하게 배분하는 계약제도	협력		중기부
11	녹색인증제품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	품질인증		산업부
12	융·복합기술개발사업 성공제품	중소기업과 연구기관 또는 중소기업간 공동기술개발을 지원하는 R&D지원사업	융합기술		중기부
13	산업융합품목	중소·중견기업의 산업융합 성과로 만들어진 산업융합품목을 선정하여 산업융합 활성화에 기여	융합기술		산업부
14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인증제품	기존 인증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기준이 없는 경우 이에 대한 인증을 패스트 트랙으로 진행하여 기업의 시장진출 지원	융합기술		산업부
15	ICT융합품질인증 제품	정보통신 융합기술 및 서비스 등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현장평가와 시험평가 등 인증심사를 통해 확인·인증	융합기술		과기부
16	우수산업 디자인상품	상품의 외관·기능·재료·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디자인의 우수성이 인정된 상품에 대해 지정	상표· 디자인		산업부

참고 3

기술개발제품 공공구매 현황

□ 기술개발제품 공공구매액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구매액(조원)	3.11	3.70	4.52	4.53

□ 인증별 기술개발제품 구매현황('18년 기준)

(단위 : 억원)

우수조달	성능인증	GS	NEP	NET	공동상표	구매조건부	민간공동투자
28,097 (49.1%)	12,150 (21.3%)	4,575 (8.0%)	1,597 (2.8%)	1,132 (2.0%)	644 (1.1%)	682 (1.2%)	165 (0.3%)
개발선행제품	성과공유 과제	녹색인증	융복합 기술개발	산업융합 품목	산업융합 적합성	ICT융합 품질	우수 디자인
235 (0.4%)	77 (0.1%)	6,872 (12.0%)	37 (0.1%)	22 (0.04%)	5 (0.01%)	7 (0.01%)	872 (1.5%)

* 전체 구매액은 제품별 복수 인증을 받은 경우 중복 산정

□ 기술개발제품 상위 10개 품목 현황('18년 구매액/구매건수 기준)

구매액 기준				구매건수 기준			
순번	품목명	구매액 (억원)	구매 건수	순번	품목명	구매 건수	구매액 (억원)
1	데스크톱컴퓨터	2,642	24,344	1	데스크톱컴퓨터	24,344	2,642
2	금속제 창	1,984	3,668	2	금속제창	3,668	1,984
3	보호배전반	1,923	9	3	LED실내조명등	8,332	864
4	태양광발전장치	1,153	1,311	4	분전반	4,607	737
5	배전반	1,043	1,106	5	경질폴리염화비닐관	6,382	567
6	LED조명등	864	8,332	6	LCD패널 또는 모니터	3,575	180
7	영상감시장치	844	2,689	7	액정모니터	5,198	170
8	분전반	737	4,607	8	작업용의자	7,770	141
9	인조잔디	668	732	9	패널시스템용칸막이	4,946	89
10	구내방송장치	598	823	10	토너	3,555	39
소계		12,456	47,621	소계		72,377	7,413
기타		32,821	185,697	기타		160,941	37,864

참고 4

공공조달 관련 이해당사자 의견

① 공공기관 발주자

- 시장에 없는 제품 구매를 위해 민간 전문가와 협의하여 규격을 확정시켜 발주할 수 있는 제도 마련 필요(LH공사 세종스마트시티 추진단 ○○○ 차장)
- 혁신제품을 사용하고 싶어도 경쟁입찰 중심의 계약제도 운영 및 감사 우려가 있음(수자원공사 물산업플랫폼센터 ○○○ 부장)
- 새로운 방식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혁신제품은 보통 당해 예산에 미편성되어 조속한 구매가 어려움(국립공원공단 환경관리부 ○○○ 과장)
- 스마트시티 활성화를 위하여 현행 분리(서비스·물품·공사) 발주 및 대기업 참여 배제 방식의 조달관행에서 벗어나 관련 서비스의 통합 발주 등 새로운 조달방식 도입 필요(국토부 국토도시실 ○○○ 과장)

② 기업 및 연구기관

- 혁신제품은 인증·시험평가 기관에서 평가할 수 있는 항목이 없으므로 새로운 평가기준이 필요(드론개발업체 보라스카이 ○○○ 이사)
- ① 공공기관은 개요 수준의 수요를 제기하고 제3의 전문기관이 개별 공공수요들을 통합하여 구체적 기술적 사양(specs)을 관리할 필요, ② 시범 활용이 성공하면 다른 기관의 추가 구매로 연계·활성화될 필요, ③ 공공조달의 경우 선정 시점에 구매공고가 이뤄져 단기 대응이 가능한 기업만 입찰 가능하여 혁신 경쟁 유인력 부족(한국항공우주연구원 ○○○ 연구원)
- 새로운 융복합 제품에 대한 산업분류 신설 및 목록번호 부여에 시간이 소요되어 공공시장 진입이 어려움(온실가스 관련 벤처기업 ○○○ 대표)
- 4년 전 개발 완료된 ‘정전기 활용 매연저감장치’는 실증 기관을 확보하기 어려워 상용화에 실패함(한국기계연구원 ○○○ 연구원)

<벤처기업 설문조사 :전자신문 & 벤처기업협회 공동 조사 '19.4>

[문재인정부 2년] 수정 시급한 혁신성장 정책은... 공공조달 시장 혁신 (전자신문)

정부의 혁신성장 정책 가운데 실효성이 없거나 수정·보완이 필요한 정책으로 “창업·벤처기업 시범 구매 등 공공조달 시장 혁신”을 일순위로 꼽았다 ... 기술혁신 제품·서비스를 개발하더라도 경영상태나 납품실적 부족 등으로 시장 진입이 어렵다. 공공조달 문턱을 낮추고 시범 구매를 활성화해, 벤처·스타트업의 “성장디딤돌” 역할을 요구한 셈이다.

※ 공공조달 시장혁신(25.5%), 모험자본공급(23.5%), 기술탈취 근절(17.6%), 스마트 팩토리 구축(14.6%), 기타(18.8%)

참고 5

혁신성 평가기준 (산업부)

- 공공서비스 수준의 제고와 기술혁신을 촉진하는 관점에서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혁신수요 발굴 또는 혁신제품 구매 패스트 트랙 I·II 등의 사업에 활용
- 발주기관이 제시한 공공수요의 평가에서 공공성 및 사회적 가치를 핵심 평가 기준으로 반영하여 채택된 공공수요의 해결을 통한 공공 서비스 수준의 제고

평가영역	평가항목	착안사항
공공성 및 사회적 가치	공공현안 및 사회적 가치창출	○ 공공의 현안 및 국민 생활 향상을 통한 사회적 가치가 창출되는 분야의 기술·제품인지 여부 * 내외국인 생활편익 향상, 국민 생명·안전 보호, 기관 경영 효율화를 통한 사회적 가치 상승 등
	공공구매 필요성	○ 신기술 적용제품·서비스의 공공구매 필요성 정도 * 민간에서 해결하기 곤란한 사회적 문제인지 여부 * 민간에서 구매하기 힘든 신제품 또는 혁신 제품에 해당하여 공공에서 초기 구매가 필요한지 여부
	현안의 시급성	○ 공공부문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문제인지 여부 *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 국민적 수요가 많고, 공론화 정도 * 해당 문제로 인한 기관의 경영상 손실과 시급성 정도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	○ 신기술 적용제품·서비스가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 국민생활 향상, 사회 안전 해결, 공공경영 개선 기여도 * 사회적 리스크 감소와 경제적 효용 향상 기여도
시장성	기대 시장규모	○ 기존 시장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 신기술 적용 제품·서비스를 통한 시장 창출 가능성 및 규모 ○ 기존 시장이 존재하는 경우 * 신기술 적용 제품·서비스를 통한 혁신으로 기존시장에서 새롭게 차지할 시장점유율 및 규모
	타 산업 파급성	○ 공공구매 확장성 * 타 공공부문으로의 적용가능성 및 규모(국내/국외) ○ 적용 기술의 유사산업 및 타 산업으로의 파급성·발전 가능성 * 관련 산업 및 시장 창출을 이끌어낼 수 있는 기술인지 * 국내 민간 유사분야 또는 타 분야로의 적용가능성 및 규모
혁신성	기술·제품의 신규성	○ 기존에 존재하는 제품인지, 기존 제품과 새로운 제품이 융합된 제품인지, 기존에 없던 새로운 제품인지 * 시장에 존재하는 경쟁기술 또는 유사한 관련 기술의 수 * 품질, 사용의 편의성, 가격프리미엄 등
	기술·제품의 탁월성	○ 기존에 존재하는 제품·서비스 등과 비교하여 월등한 향상을 이끌어내는 혁신기술이 적용되었는지
	기술적 완성도 및 실현가능성	○ 기존 확보 보유기술의 완성도 ○ 신기술 적용제품·서비스 개발 및 사업화 실현 가능성

참고 6-1 도전적 수요기반 혁신과제 발굴·지원 사례(국립공원 관리 맞춤형 드론)

1 국립공원 관리용 맞춤형 드론 도입 필요성

- 지형이 넓고 험한 국립공원은 관리사각지대^①와 위험지역에 상시 순찰 인력의 배치가 어려워 불법행위^②와 안전사고^③에 대한 선제 대응 곤란

①출입금지(갯길 430개, 도서 237개), ②주요 불법 행위(최근 5년): 출입 위반(42.2%), 취사 위반(19.1%), ③사망사고(최근 5년): 총 106명, 심장사 59명, 추락사 25명 등

2 맞춤형 드론 도입 추진상의 어려움

- 정보 부족: 공원 관리에 적합한 드론 제품과 업체에 관한 정보 부족
- 예산 부족: 발굴된 신규 수요의 경우 기존에 편성된 예산 활용 곤란
- 입찰원칙: 경쟁입찰은 테스트베드에서 실증·확인된 기종도 구매제품으로 선정될 보장이 없으며, 적정 업자임에도 수의계약으로 계약하는 방식은 사후 감사책임 등으로 구매부서가 부정적으로 인식

3 맞춤형 드론 도입을 위한 적극적 노력 ① (수요발굴) 관련 전직원 수요조사('16.7월~8월)로 맞춤형 드론 수요 발굴

(수요) 무인기가 불법행위자의 출입 감지 시 행위자 추적과 동시에 방송을 통해 불법행위를 예방·억제하고, 행위자 불응 시 정지비행을 하며 실시간 방송으로 불법행위자와 소통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출 것(공단 상황실과 실시간 영상전송, 야간 서치라이트 및 사이렌 경고음)

② (제품탐색) 입찰공고 등 인터넷 검색, 컨퍼런스 참석 및 업체 방문 등

- 조달청 입찰공고 및 온라인 판매처 등 인터넷 검색('16.8월~12월)
- 드론심포지엄('16.8월) 및 드론활성화 컨퍼런스('17.3월) 참석 및 상담
- 현수막 부착 드론 시범운영('17.1월) → 기체 망실·파손으로 도입 시도 중단('17.2월)
- 방송 가능 드론업체 방문('17.2월) 및 공원 내 시연('17.6월) → 현장 기동성 저하 등 성능 미달
- 드론산업진흥협의회 회원가입('17.6월) 및 드론쇼코리아 참석 내수상담('18.1월)

③ (테스트베드 제공) 10개 국립공원에서 13개 기종으로 총 12회 실시('18.7월~11월)

④ (도입결정) 구매(3대) 및 임차(3대) ('18.11월)

<문제해결을 위한 적극행정>

- ◇ 적극적 정보 탐색: 인터넷 검색, 컨퍼런스 및 관련 업체 방문 등
- ◇ 예산확보: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구입 예산 확보 (기존 예산의 세목 간 내역 변경)
- ◇ 수의계약 방식: 공단 내부방침(기관장 결재)으로 수의계약을 하기로 결정하여 실증 확인된 제품들로 계약체결 (수의계약 사유: 발굴된 수요의 사양을 충족하는 기존 제품 無)

4 공원관리 맞춤형 드론 도입 효과

- 국립공원 관리 혁신: 신기술 활용으로 인력중심의 공원관리 한계 극복

순찰·방송 드론 - 한려해상·태안해안	수직이착륙형 드론 - 소백산
선박접안 없이 도서지역 순찰, 갯벌지역 등 순찰 곤란 지역 주야간 순찰 등 해상·해안 관리 능력 향상	단시간내 고사목·병해충 피해 전체 현황 파악 AI 활용 자동 탐지(아시아원격탐사학술대회 혁신상)

- 혁신성장 지원: 테스트베드 제공 및 판로확대(협력 기업 타기관 13건 납품)

- 드론 관련 규제혁신* 및 탐방객 대상 국산드론 홍보

* 공기관 처음으로 '항공안전법 적용 특례 지정' 사례

참고 6-2

도전적 수요 기반 혁신경제 발흥·지원 사례 미국 국방성의 트랜지스터 구매

□ 스푸트니크 쇼크와 미국의 반응

- 스푸트니크 쇼크*(1957.10.4)로 美 국방부는 미사일 분야의 기술격차를 줄이기 위해 진공관을 대체하는 전자소자(電子素子)로서 고온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반도체 트랜지스터 확보가 절박해짐

* 소련의 세계 최초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1 발사 성공으로 핵탄두 장착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미 본토를 선제공격할 수 있다고 미국이 느낀 공포로, 미국은 소련과의 미사일 기술격차가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될 정도라는 인식을 갖게 됨

□ 美 국방성의 “시장에 없는 트랜지스터” 구매 과정

① 미 국방성을 대리한 IBM의 군수산업 부서의 도전적 사양(SPECs) 제시

(제품 및 용도) 트랜지스터로서 초음속 B-70 폭격기의 항법 컴퓨터에 사용

(요구 사양) 고온에서 안정적인 동작 및 빠른 전환속도(switching speed)

⇒ 당시 상용화된 게르마늄 트랜지스터가 작동할 수 없는 고온 환경에서 작동되면서도 시장에 존재하는 어떠한 트랜지스터보다 빠르고 도전적이어야 하는 사양

② 실리콘밸리 스타트업 페어차일드社의 도전

· 샌프란시스코 만 지역에서 8명의 젊은 과학기술자들은 실리콘 트랜지스터를 상용화 할 목표로 페어차일드社 설립(1957.9.18.)

· 페어차일드社의 리더인 노이스(Noyce)와 IBM 구매 담당자의 기술 협상(1957.12월)

· 노이스는 특정 형태(꼭대기가 평탄한 돌출형태)의 실리콘 재질 트랜지스터로 IBM의 요구 사양을 맞출 수 있음을 설득하고, 이에 특화된 제조기술과 생산설비 확보에 집중

③ 구매 계약 체결: IBM은 시장에 없는 사양의 트랜지스터 100개를 개당 150불의 가격(현재 2,000불 수준)으로 페어차일드社와 8월을 납품기한으로 계약(1958.3월)

※ 계약 당시 페어차일드社는 상용제품의 납품 실적 없었음

④ 납품 성공: 페어차일드社는 IBM의 사양을 만족하는 트랜지스터 제조기술을 개발(1958.5월)하고 성공적으로 납품(모델명 2N697)

⇒ 반도체 산업의 불모지였던 실리콘밸리 지역 최초 상용화 반도체 제품사례

□ 파급 효과

- 페어차일드社의 트랜지스터 기술은 美 방위력을 대폭 개선하고 훗날 아폴로 달탐사 프로젝트 성공의 핵심 경쟁력이 됨

- 페어차일드社의 성공을 바탕으로 샌프란시스코 만 지역은 실리콘 반도체 산업이 번성하게 되고, 훗날 실리콘밸리로 명명됨

참고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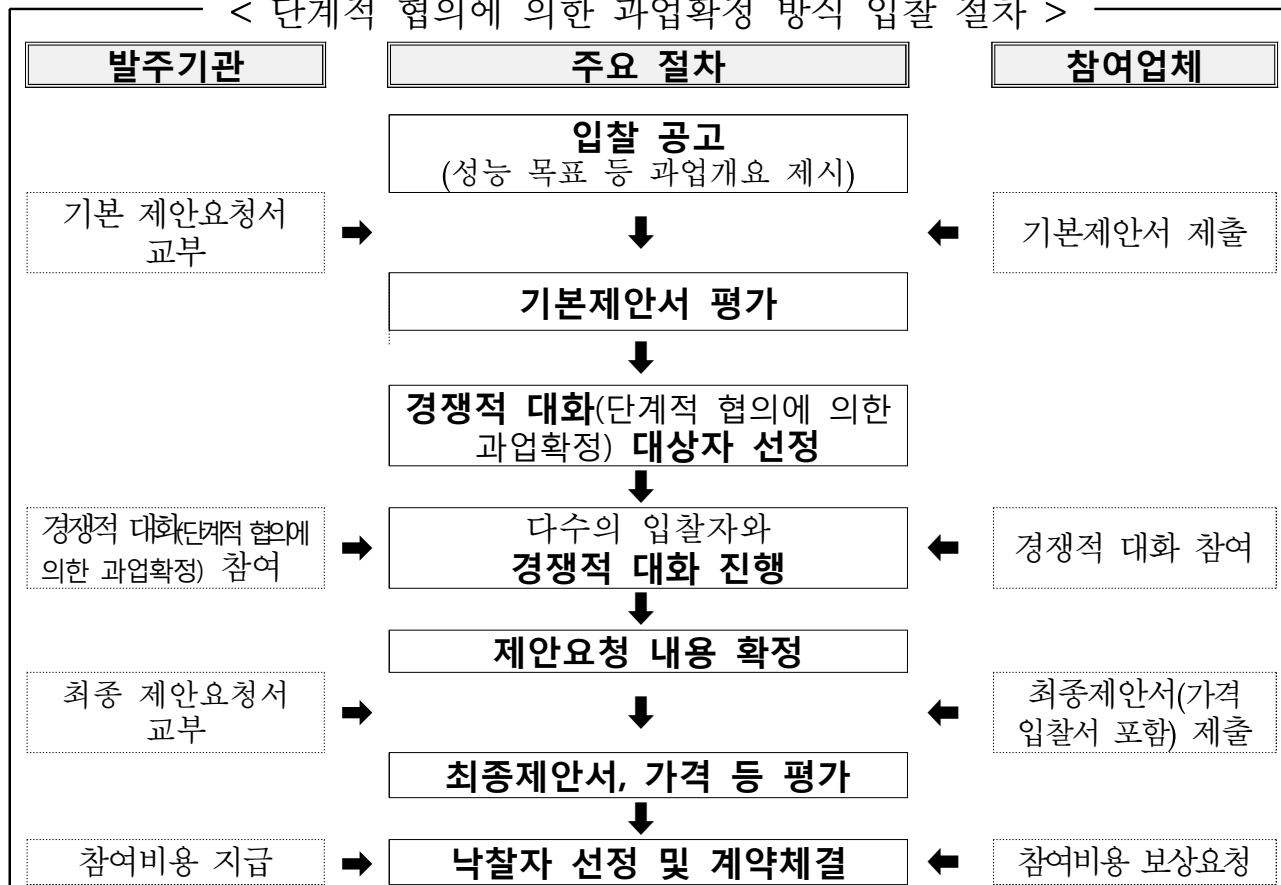
단계적 협의에 의한 과업확정 방식 입찰

□ 관련 계약예규 주요 내용

- (절차) ① 발주기관의 기본제안요청서에 대한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를 대상 제안서 평가, 단계적 협의에 의한 과업확정방식 참여업체 선정
- ② 2회 이상에 걸쳐 대화참여자와 개별적으로 기술적·재무적 요구 사항에 대하여 대화 ③ 각 대화참여자는 대화결과를 기초로 최종 제안서를 작성, 발주자는 최고 득점자를 낙찰자로 선정
- (평가방식) 기술능력 평가 90점, 입찰가격 평가 10점
 - 기술능력 평가는 문제해결능력, 사업수행계획, 지원기술 등을 평가(실적, 재무능력 등 정량평가는 배제)
- (낙찰탈락자 보상) 사업예산의 1.5% 범위 내에서 보상

□ 제도 조기안착을 위해 조달청 등 주요 발주기관 주도로 세부기준 마련 및 대상사업 적극 발굴·추진 필요

< 단계적 협의에 의한 과업확정 방식 입찰 절차 >



참고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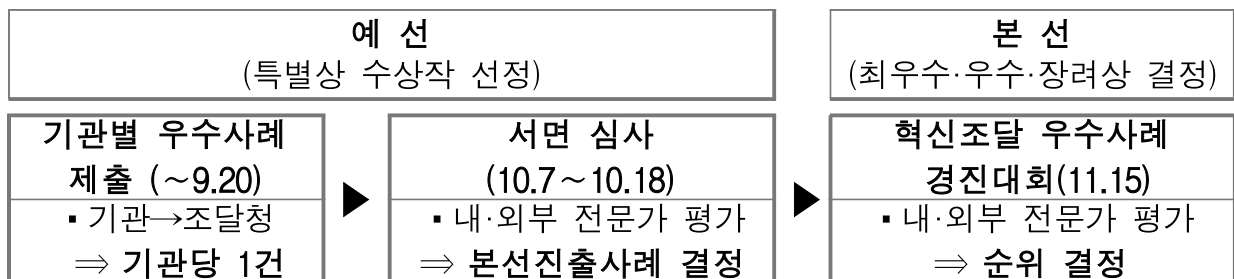
혁신조달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계획

□ 추진배경

- 공공조달수요를 활용하여 혁신성장을 실현하고 위험과 불확실성을 감수하는 등 적극적 조달행정을 추진한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 필요
- 각 기관별로 적극적·혁신적 조달행정을 추진한 성과에 대해 경진대회에서 심사하여 우수사례에 대해 포상부여

□ 혁신조달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요

- (일시 및 장소) '19.11월중 / 서울지방조달청 PPS홀(예정)
- (참여대상)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 (제출대상) 각 기관에서 혁신적으로 물품이나 용역을 조달한 사례
 - 혁신조달을 통해 조달기업의 기술수준과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사례(매출액·수출실적 등의 현저한 증가 초래)
 - 공공서비스 수준이 향상되어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하거나 투입 예산·인력이 전에 비해 대폭 감소한 사례
 - 혁신제품 구매 이후 지속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제도개선 노력 및 의지
- (선발절차) 예선에서 본선 출품작 선정 후, 본선에서 총점 순으로 최우수, 우수, 장려상, 특별상 등 결정



- (포상) 우수사례별로 기관 및 개인에게 수여

* 포상 훈격 및 규모는 관계부처와 협의 후 결정 예정

참고 9

혁신조달 관련 법령 개정 진행 상황

내용	부처	진행 상황
(과제 1-②) · 혁신성 평가기준 마련	산자부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사업화 평가 관리지침(고시) - 입법완료('19.5.10)
(과제 1-③) 패스트트랙 I		
· 수의계약 근거(국가 당사자)	기재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①3호아. 목 - 시행 중('19.3월)
· 수의계약 근거(지방자치단체 당사자)	행안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①6호라목8) - 입법예고(3.27~5.7) - 입법완료(6.25), 시행(9.26)
(과제 1-③) 패스트트랙 II		
· 수의계약 근거(국가 당사자)	기재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①5호사. 목 - 입법예고(5.10~6.19) - 입법완료(3분기)
· 수의계약 근거(지자체 당사자)	행안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①4호 거. 목 - 입법예고(3.27~5.7), - 입법완료(3분기)
· 혁신제품 시범사업 근거	기재부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7조의3 - 입법예고(5.27~7.8) - 입법완료(3분기)
(과제 1-④) 단계적 협의에 의한 과업확정방식(경쟁적 대화방식)		
· 경쟁적 대화 근거(국가 당사자)	기재부	국가계약법 시행령 - 입법완료('18.12.4), 시행('19.3.5)
· 경쟁적 대화 근거(지자체 당사자)	행안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4조의2 - 입법예고('19.3.27~5.7) - 입법완료(6.25), 시행(9.26)
(과제 2-②) ·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신설	기재부	조달사업법 개정 추진('19.하)
(과제4-①) · 징계면책·사전컨설팅 -고의·중과실 배제 추정요건 완화, -사전컨설팅에 대한 징계면책 규정 신설	인사처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 입법예고(5.15~6.10) - 입법완료(6.25)